

與野, ‘정통망법·내란재판부’ 두고 필리버스터 격돌 예고

오늘부터 24일까지 본회의의 진행
정보통신망법, 내란전담재판부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지연 시도
민주당, ‘살라미 전술’로 맞받을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서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가운데, 오는 22~24일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노린다.

국회는 오는 22~24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연다. 집권여당이자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안건으로 올려 처리를 노리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이를 지연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통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맞받을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

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연설자를 준비하고 본회의의 대기조를 편성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당내 숙의 과정을 거쳐 수정된 내용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름에 ‘12·3’,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실시되며 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담재판부는 복수 재판부로 설치되고 그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 않고 사법부에서 전담 재판부 설치 개수를 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강

행하면 필리버스터로 지연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결정된다. 그 절차를 입법으로 왜곡하는 순간, 사법 정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한다”며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분명한 특별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왜 위헌 논란이 뚜렷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고집하는지, 그 속내와 진실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외범죄,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법 등도 추진 중이어서, 새해가 돼도 여야의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당정,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마련”

10·15 대책 이후 정부와 모니터링
발표시점, 12월 31일 기준보다는
종합적으로 상황 고려해 결정할 것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당 태스크포스(TF)는 두세 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10·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정부와 함께 모니터링해왔고 고위당정회의에서 그러한 상황이 보고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수원·용인·안양·의왕·하남 등)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출·전매·실거주 등 전방위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과 정부는 면밀하게 예정한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것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국토

교통부 장관이 밝힌대로 꼭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에 발표를 한다는 의미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전 후에 발표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 주도로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해왔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

제3자 추천방식으로 특검 진행
통과는 어려울 듯… ‘여론전’ 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세계평화통일연합(통일교)과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법’(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법시는 제3자가 추천하기로 정했다. 다만 두 당이 힘을 합쳐도 특검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 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추천 권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양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간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자신들이 갖거나 제3자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해 제3자 추천으로 확정됐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발의’ 관련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과 더불어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특검 등 ‘쌍특검’을 주장했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우선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들여다본 이후 필요하면 민 특검의 추가 조작 의혹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오는 22일 오전에 초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최종 발의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보수야권의 첫 ‘합동 전선’이 형성된다. 그간 개혁신당은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다른 행보를 보여왔지만, 통일교 의혹에서는 양당이 힘을 합치는 분위기다.

다만, 특검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두당의 의석수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107석, 개혁신당은 3석에 그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이고 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6석)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면 특검법은 통과되지 못한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할 전망이다. 실질적인 특검 통과 여부보다는 ‘여론전’을 위한 특검법 발의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예진 기자

이준석, ‘尹 공천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김건희 특검팀, 이준석 소환조사
이준석 “굉장히 무리한 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리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준석 대표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사무실에서 조사했다. 특검은 이 대표를 지난 2022년 6월 지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총선 공천개입 의혹 관련 참

고인으로도 조사한다.

이 대표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진실이었다. 이번에도 제가 한 말들이 옳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게 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입장이니, 공천 과정에서 전횡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 이 대표는 “당 대표가 공천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며 “저는 (부당한 공천을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

검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다면 제가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검사 1명이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 출석 요구서엔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특정 지역에 공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를 이 대표가 들어주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공천개입 중범’이 된다. 특검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서예진 기자 syj@